광주시, 대한민국 첫 '자율주행 실증도시' 지정

광주시가 우리나라 최초의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지정됐다. 광주 전역이 하나의 실증무대로 활용돼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엔젤레스, 중국 우한처럼 자율주행차가 도시 전체를 자유롭게 다니며 자율주행 인공지능(AI) 기술개발과 서비스 상용화 검증이 동시에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광주시는 국가AI데이터센터에 구축된 GPU 자원을 활용해 자율주행 인공지능(AI) 학습을 지원하고, 가상환경에서 다양한 주행 시나리오 검증을 병행하는 등 광주가 보유한 인공지능 기반시설(인프라)과 기술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국토교통부가 21일 발표한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방안'에 따라 대한민국 최초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지정, 도시 전역을 대상으로 대규모 자율주행 실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지난해 9월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AI모빌리티 신도시 구상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광주 미래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국토부 지정… 도시 전역 AI 학습·검증·운행 등 실증무대
국가AI데이터센터 GPU·VR 등 인프라·자원·기술 총동원
전국 최초 도시단위 자율주행시범지구·메가샌드박스 운영
강기정 시장 "자율주행 실증으로 AI모빌리티 도시 우뚝"

자율주행 실증도시는 전국 최초로 도시 전체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이자 메가샌드박스로 지정되는 사업이다. 국비 610억원을 투입해 자율차 200대를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운행할 계획이다.

실증 구간은 광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지만 초기에는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곽지역에서 운행을 시작해 도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면 시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무료 탑승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오는 4월 광주시 전역이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되면 광산구, 북구, 서구 일부에서 실증을 시작한다. 내년 중에는 서구, 남구, 동구까지 포함해 조선대병원 등 주요 지점을 추가하는 등 도시 단위 실증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일부 시도에서 도시 일부 구간을 시범운영지구로 지정해 특정노선을 중심으로 10대 미만의 자율주행차를 운행한 사례는 있었으나, 이번처럼 도시 전역을 대상으로 200대 규모의 자율차를 운행하고 도시전체를 메가 샌드박스로 지정하는 것은 전국 최초이다.

이번 실증사업의 핵심은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이다. 자율주행에 최적화된 소프트웨어 중심차량(SDV) 200대가 운행되며, 수집한 대규모 주행 데이터는 광주 국가AI데이터센터의 고성능 컴퓨터를 통해 학습된다. 이를 통해 실제 도로 환경에서 자율주행 인공지능(AI)의 판단 능력과 안전성을 고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도시 전체가 시범운영지구와 메가샌드박스로 지정되면 자율주행 기술·부품·서비스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과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등이 광주에 집적돼 자율차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는 ▲도시 단위의 규제가 없는 실증환경 ▲기술개발을 위한 전용차량 제공 ▲대규모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확보 ▲실증도시 관제·보험 지원 ▲실증도시 상생·협력 지원 등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광주시는 특히 오는 3월께 5개 자치구를 비롯해 택시업계, 기업, 대학, 연구기관, 지방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또 완성차 제작사-자율주행 기업-플랫폼 기업-보험사가 함께하는 'K-자율주행 협력모델'을 구축해 기술개발과 실증을 전방위로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시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사업을 인공지능(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피지컬 인공지능(AI) 기반 미래차 산업혁신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연계해 자율주행 실증을 넘어 개발·실증·생산·인증까지 아우르는 미래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모빌리티 시범도시는 자율주행차, 로봇, 드론, 도심항공 교통(UAM) 등 첨단 모빌리티 기반시설과 인공지능(AI) 통합관제시스템을 갖춘 미래형 복합 시범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사전기획을 완료하고 하반기 기본구상과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오는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피지컬 인공지능(AI) 기반 미래차산업 혁신클러스터는 지역 부품기업의 미래차 부품 개발-실증-인증을 지원하고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들을 집적화하는 사업이다. 올해 예비타당성조사 기획 용역을 추진해 2027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국비 반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자율주행차 산업은 대한민국과 광주의 미래성장을 여는 성장엔진"이라며 "정부가 도시 단위 첫 실증도시로 광주로 선정한 것은 광주를 AI 모빌리티 미래산업 도시로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공약과 의지이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어 "이번 실증사업을 출발점으로 자율주행 기술이 시민의 일상에 안착하도록 하고, 2026년을 '부강한 광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신영길 기자

광주 제조업체 80% "AI 전환 계획 없다"

광주인자위, 광주 제조업 (AX) 실태조사·연구 발표
"초기투자비용·전문인력 부족 등 현실적 장벽 탓"

광주지역 제조업체 10곳 중 8곳은 인공지능 전환(AX)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광주인자위)는 21일 지역 내 제조업체들의 인공지능 도입 현황과 애로사항을 분석한 '2025년 광주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AX) 실태조사·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광주 제조업체 150개사가 응답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제조업체의 디지털 전환(DX)에 대해 전체 응답 기업의 29.5%가 '이미 디지털 기술을 활용 중', 23.2%는 '계획 중'인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계획없다'는 47.3%로 조사됐다.

인공지능 전환(AX)에 대한 조사결과는 전체 응답 기업의 6.3%가 '활용 중'으로 답했고 '계획 중'은 14.0%가 응답했다. '계획없다'는 79.7%로 아직은 AI에 대한 관심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기업들의 AI 미도입 사유로는 '초기 투자·구독 비용 부담(27.0%)'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내부 전문 인력·활용 역량·담당조직 부족(18.8%)', '인프라와 호환·데이터 축적·표준화 미흡(15.5%)'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 기업들의 분야별 AI관련 인력 채용의사를 살펴보면 '생산/생산관리(25.1%)', '품질/연구개발(21.7%)''경영관리(21.3%)', '재고/물류(16.9%)', ' 영업/마케팅(15.0%)'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AI 활용 정부지원 유형으로는 '자금지원(74.0%)'을 가장 높게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기술지원(9.3%)', '금융지원(5.3%)'등이 뒤를 이었다.

실태조사 결과 광주 지역 제조 기업들은 AI 전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초기 투자 비용과 전문 인력 부족이라는 현실적 장벽에 부딪혀 실제 도입에는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I 기술 도입을 위해서는 기업 규모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통합부터 단계별 진입 전략이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인자위 이후형 사무처장은 "실태조사 결과 지역 제조업체들의 AI 기술 도입이나 활용이 저조해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한 대응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생산,품질 분야에서는 잠재적 관심이 확인된 만큼 관련 훈련과정 개설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채일 기자

광주시, '장애여성 취업 지원' 수행 단체 공모

장애여성 직무교육·구인기업 발굴 등 취업 지원 전담… 26일까지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장애여성의 안정적인 취업과 고용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장애여성 취업 지원사업'을 수행할 단체(보조사업자)를 오는 2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이 사업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여성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취업 연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인의 특성과 근무 여건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연계를 목표로 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광주시에 소재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비영리단체·법인 또는 교육기관이다.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장애여성 대상 직무교육 운영 ▲구인기업 발굴 및 취업알선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사업 전반을 전담 수행하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오는 26일까지 광주시 여성가족과로 방문 접수하면 되며,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시는 2017년부터 매년 장애여성 취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사업 수행기관인 광주여성인력개발센터가 11개 기업과 연계해 24명의 장애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최경화 여성가족국장은 "장애여성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취업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취업 지원을 통해 장애여성의 고용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 인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전남도, 2025년 농수산식품 수출 사상 첫 8억달러 돌파

8억7천만달러로 전년보다 12.7% 증가… 김·쌀·수산식품 성장

전라남도는 2025년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총 8억 7천767만 달러로 집계돼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7억 7천878만 달러보다 12.7% 증가한 규모로, 미국 상호관세 장벽 등 어려운 통상 여건에서 거둔 의미 있는 성과다.

전남 농수산식품 수출은 2021년 5억 6천12만 달러, 2022년 5억 5천894만 달러 수준에 머물렀으나, 2023년 6억 3천163만 달러, 2024년 7억 7천878만 달러를 기록한 데 이어 2025년 처음으로 8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 같은 성과는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등 경쟁력 강화 정책과 해외 시장 개척단 파견, 국제박람회 참가,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수출보험료 지원, 온·오프라인 해외상설 판매장 운영, '케이(K)-전남김' 브랜드 육성 등 수출 유망품목 집중 지원과 케이-푸드 확산 노력이 결실을 본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상호관세 등 통상 환경이 악화된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이 13.1% 증가해 1억 7천512만 달러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 품목인 김은 10.4%, 배는 17.3% 각각 늘어나며 미국 수출 확대를 견인했다.

품목별로는 수산식품 수출이 5억 4천925만 달러로 전체의 62.6%를 차지했으며, 김은 4억 3천167만 달러로 전남 농수산식품 수출의 49.1%를 담당했다.

신선농산물 수출도 1억 314만 달러로 전년보다 23.3% 증가했다. 전남 쌀은 일본으로의 첫 수출에 성공해 336톤을 기록했으며, 이는 국내 전체 쌀 수출량의 50.6%를 차지하는 성과다.

국가별로는 우크라이나(41.4%), 태국(32.1%), 폴란드(29.9%), 독일(24.9%) 등 신흥시장에서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이 통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분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영광이 전년보다 283.4% 증가해 가장 큰 성장폭을 보였고, 함평(174.6%), 화순(171.7%) 등에서도 수출이 크게 확대됐다. /신종팔 기자